



폭염 속 청명한 여름 하늘
 한낮의 기온이 섭씨 36도를 웃도는 등 무더위가 맹위를 떨친 30일, 광주시 남구 사직동에서 바라본 광주 하늘에 몽게구름이 두둥실 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역대급 폭염에도...관련 법안 국회서 낮잠

재난 포함 개정안 번번이 좌절...법안 없어 지자체 대책 무용지물
 주거빈곤층·취약계층 지원, 피해 보상 등 법적 근거 마련 시급

연일 최고 기온을 갈아치우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정작 '폭염'은 재난에 포함되지 못하고 관련 대책 법안들도 국회에서 수년째 계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광주·전남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폭염 대책 등을 마련하고 있지만, 주거빈곤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대책 등이 '들쭉날쭉'이어서 폭염 관련 법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0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자연재난에 태풍이나 홍수, 황사 등이 포함돼 있지만, 폭염은 재난에서 제외돼 있다.

최악의 폭염이 한반도를 덮친 1994년 이후인 지난 18대 국회부터 자연재난에 폭염을 포함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번번이 좌절됐다. 또한, 20대 국회인 지난 2016년부터 김두관(더불어민주당), 이명수(정병국·윤영석·윤재욱(이상 자유한국당), 손

금주(무소속) 의원 등이 폭염을 재난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여전히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 하지만, 올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온열 질환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전남의 경우 가족·어류 폐사 등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면서 폭염을 재난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역민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들도 현행 관련법상 폭염이 재난에 포함되지 않은 만큼 폭염 피해에 대한 실질적 지원의 법적 근거가 없어 대부분 폭염 대책이 예방 차원에 그치고 있다. 현장 점검 등을 통한 폭염 피해현황 파악, 폭염 구급대 운영, 폭염취약계층 보호관리 등이 주요 업무다. 아울러 무더위 쉼터 운영, 도로 물 뿌리기, 그늘막 설치, 축사 물 뿌리기, 스프링클러 설치 등을 통해 폭염 피해에 적극 대응 중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속될 폭염에 대비

해 주거빈곤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가정 전기 누진세 면제 등 전기 요금 지원 등의 실질적 지원과 폭염 피해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2011년 9월 발생한 전국적인 이상 기후로 인해 전기요금이 급증하면서 발생한 '블랙아웃'이 또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차원에서 지자체와 함께 폭염의 예방에서부터 대비, 대응, 복구 단계에 주도적으로 나서고, 전문화된 폭염 대응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폭염도 재난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강조

했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폭염 관련법 개정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폭염 관련법 개정에는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송창영 한양대 방재안전공학과 교수는 "폭염은 이제 일시적인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아닌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할 하나의 재난으로 새롭게 바라보아야 한다"면서 "폭염은 인명피해 뿐만 아니라 경제·산업적 위협적 큰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자연재난 유형에 포함되어야 하며, 국가 재난관리 책임기관과 지자체 등이 대응할 매뉴얼과 국가 에너지 수요·공급관리 등 산업별 적용 매뉴얼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권일 기자 cki@

19일째...광주 폭염 일수 기록 오늘 깬다

광주의 폭염 최장 지속일수가 지난 1994년과 같은 19일을 기록하면서 역대급 폭염으로 남게됐다.

30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42분께 광주 낮 최고기온이 36도를 관측

돼 폭염최장 지속일수가 19일로 늘어났다. 지난 12일부터 30일까지 무려 19일 동안 매일 33도 이상 고온이 이어진 것이다. 광주 지역 역대 폭염 최장지속일수는 1994년의 19일이다.
 /김현영 기자 young@

광주·전남 소득 전국 최저인데 소비성향은 전국 평균보다 높네

車·교육·의료 지출 많아

광주·전남지역 1인당 개인소득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의 평균 소비성향은 타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최민호 기획금융팀 조사역은 '광주·전남 소비행태 특징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소비성향의 기준이 되는 개인소득이 광주의 경우 1658만원, 전남은 1497만원으로 전국 광역시·도 중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반면, 평균 소비성향(2016년 기준)은 광주 93%, 전남 91%로 전국 평균(88%)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광주 지역 1인당 민간소비도 1537만원으로 광역시 평균(1525만원)보다 높았다. 전남의 경우 1358만원으로 광역시·도 평균(1417만원)의 96.0% 수준이었다. 수치로만 보면 소득은 낮는데 소비는 높은 형태로, 최 조사역은 "1인당 소

비액이 많기보다는 개인 소득이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비를 뒷받침할 소득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소득을 늘리기 위한 방안이 절실하다.

가계소비의 경우 자동차, 의료보건, 교육 관련 지출비중이 높았다. 의료보건은 고령화로, 교육 관련 지출 비중이 높음은 광주의 학령인구(6~21세) 비중이 18.6%로 높은 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사설학원 수도 1000명 당 2.43개로 가장 많았다. 의료비는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의 10% 수준을 차지했다.

자동차는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의 20% 이상이 자동차 구입과 유지비용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소형차 등록 비중이 10.8%로 광역시 중 가장 낮은 점 등을 감안하면 중·대형차 위주로 자동차를 구입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남의 소형차 비중도 13.9%로 전북 다음으로 낮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

"기무사, 노무현-국방장관 통화 감청"

군인권센터 폭로... "민간인 수백만명 사찰 의혹도"

국군기무사령부가 과거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통화내용을 감청하고 민간인 수백만명을 사찰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30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 요원 제보 등에 따르면 기무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윤광웅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하는 것까지 감청했다"며 "장관이 사용하는 군용 유선전화를 감청한 것인데, 대통령과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할 기무사가 지휘권까지 감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센터는 "노 전 대통령은 당시 통화에서 문재인 민정수석에 관한 업무를 장관과 논의했다고 한다"며 "통상의 첩보 수집 과정에서 기무사가 대통령과 장관의 긴밀한 국정 토의를 감시할 까닭이 없다. 기무사도 감청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기무사는 지금까지 누적 수백만 명에 이르는 민간인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사찰한 의혹이 있다고 센터는 밝혔다. 군 부대와 군사법원, 군병원 등 군사시설을 방문한 민간인이 위병소에 제시한 개인정보를 기무사가 모두 취합한 다음 군사시설 출입자들의 주소나 출국정보, 범죄경력 등을 열람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 열람에는 경찰이 수사협조 명목으로 제공한 회선이 사용됐다고 한다.
 /연합뉴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식습관 바로잡고 메타그린으로 건강 더하기

VITALBEAUTIE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건강기능식품
 녹차추출물, 비타민 C
 50.4g [560mg X 90정]

입은 즐겁게 몸은 가볍게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식습관을 관리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죠. 이제, 하루 한 번 메타그린 습관도 시작해보세요. 체지방 감소와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줘 무너진 신진대사를 바로잡아줍니다.

건강한 아름다움의 시작
VITALBEAUTIE

제품상담 구매문의 080-023-5454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 www.amorepacificmall.com